

6조원대 전남도 금고 조례안 도의회 ‘표류’

유치 경쟁 금융기관 반발·목포상의 평가항목 문제 제기

의장 직권 상정 보류 배경 관심... 9월 재상정 11월 선정

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남도 금고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다. 개정안이 현재 금고를 맡은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다른 금융기관의 반발 그리고 목포상의 등 지역 상공인들의 문제 제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음 회기까지 조례안 수정을 놓고 금융기관들의 물밑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6조원대 금고의 향방이 한달여사이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의장이 직권

으로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임명규 의장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며 “도민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더 다듬어 오는 9월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도민과 지역 상공인들이 금융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 금고는 지역민들을 금융애로를 충분히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을 애들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금고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은행·신한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여론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목포상공회의소는 본회의 상정 전

날인 지난 18일 전남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중소기업 대출실적도 포함해 줄 것을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건의했다.

목포상의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도금고 선정시 평가항목에 포함됐던 도민대출실적과 계획이 개정조례안에 제외돼 자칫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상의는 이어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며 “이 항목이 빠진다면 기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조례안 미상정과 관련해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조례안 배경기준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이 3점으로 배정이 돼 있어 목포상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이 목포상의의 관계자에게 이를 설명한 것으

로 전해졌지만 결국엔 조례안 상정이 보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의 배정을 과거 2점에서 5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금융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9월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여론 수렴을 통해 수정받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전남도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전체예산(2014년 금고지정 당시 기준) 6조1309억원 중 5조3606억원(일반회계,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7703억원(특별회계 및 기금)을 각각 맡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9월 금고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10월중 금융기관 설명회 및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금고지정, 약정체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22개 시·군 재난관리 실적 평가

8개 우수 시군 3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22개 시·군의 재난관리 업무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시·군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중심으로 11월에 이뤄진다. 시·군별 자체평가를 거친 뒤 도에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평가 항목은 재난업무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 숙지 정도, 재난 대비 목표와 계획 수립, 재난경감계획(예방), 재난관리(대비)를 위한 구성원 간 협력체계 구축, 재난 대비 특수시책 추진 등이다.

평가 결과는 공개할 방침이며, 8개 우수 시·군에는 총 3000만원의 포상금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남도는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재난업무 평가를 계기로 각 시군이 자주적으로 선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원환자 폭행 의혹 인광의료재단·시설 특별조사

광주시 24일~26일까지

광주시는 시립 제1요양병원의 임원환자 폭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위탁기관인 인광의료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은 인광의료재단과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제1요양병원, 인광요양원 등이다. 광주시와 자치구 시설별 담당공무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조사관, 공인회계사 등이 함께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재산관리 등 운영 전반 ▲시설병원의 위탁운영 협약사항 이행 여부, 의료법, 정신보건법 준수 여부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준수사항과 시설생활자의 인권 보호 실태 등이다. 특히 노인학

대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21일부터 26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병내 안내문 등을 통해 시립병원 이용 피해사례를 받을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나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요양병원내 노인 학대와 폭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병원 관계자 인권교육, 상시적인 피해접수 창구 개설 등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최근 의사 겸 이사장이 임원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상무~첨단산단 도로, 기존 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광산구의회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과 관련,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이엽(바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무지구~첨단산단 개설 도로와 기존 도로의 진출입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상무지구~첨단산단 개설도로는 일일 교통량이 14만대를 넘어서는 빙고골대로의 교통량 부하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도심권 교통체증 조기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도로가 지나가는 광산구 신

가, 신장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기본 설계대로 추진될 경우 주민의 소외감을 클 것”이라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설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사업은 광주시가 2014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 기본설계를 마무리했다. 향후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 2022년 개설될 예정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정부 구매·원산지 표시 도입

천일염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천일염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구매제, 식품 첨가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수 북신안전일염생산자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관으로 지난 1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전 방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20kg당 2200원 선까지 급락한 천일염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염업조합의 천일염 출하 규제, 수입 소금의 천일염 둔갑 사례 단속 미비, 폭염에 따른 과다 생산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 구매제 실행과 동일한 수급대책을 시행하고 도로제설에 천일염을 사용하는 등 소비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광주 동·남을) 등 내빈들이 내륙철도 조기건설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을 마치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대구시,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 출범

광주시와 대구시는 20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광주 동·남을)과 지역국회의원, 양 지역 지방의원 등이 참석했다.

추진협의회는 두 지역 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 21명과 지역을 대표하는 경북대·전남대 총장, 기초 자치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대표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국토 동서축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면 호남과 영남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 간 191km의 고속화철도로, 건설이 마무리되면 영·호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한다.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함께 남부지역 광역경제권도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시장은 “2014년부터 대구와 함께 내륙철도건설을 논의했는데 마침내 현실화

됐다”며 “지금까지 광주와 대구가 달빛동맹으로 상생의 역사를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힘을 모아 동서 대동맥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권 시장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일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대구와 광주 간 교통망 구축은 동서축 형성은 물론 중부경제권에 대항하고 지방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무료 청력테스트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땀방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시지보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월 4만 7천원부터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땀방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시지보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